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¹⁾

조 한 슬 (KOICA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목 차

1. 서론
2.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의 6대 연구분야 선정 배경
3.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범위
4.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및 정책
5. 한국 개발협력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6. 정책 함의 및 향후 연구과제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심화로 시간과 공간이 축약되어 전 세계적으로 물질·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교류확대 등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염병 확산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한편, 상호의존의 심화로 경제위기, 환경오염, 식량안보, 이주, 분쟁 등의 문제가 글로벌 도전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세계화는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와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 본 논문은 글로벌 공공재 분야 범위연구의 결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글로벌 공공재 범위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ODA연구 2012-04-058)』를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관련 국제사회의 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개발협력연구 6대분야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연구전략과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공공재 범위연구가 기획·수행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가 2011~2015년 KOICA 6대 연구분야에 선정되게 된 배경과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범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4장부터 6장에서는 범위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및 정책, 한국 개발협력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합의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2.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의 5대 연구분야 선정 배경

1) 세계화의 심화로 인한 전지구적 문제 등장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축약으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전염병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상호의존의 심화로 경제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글로벌 도전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본격화된 세계화는 세계 금융시장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008년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된 것이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위기 전파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듯 세계의 금융시장에는 독점적이고 민주적인 권력 기관, 최종 대부자, 국제적 규제 기관, 국제안전망 등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조명 되면서,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국제적 규제, 규제기관 및 국제안정 등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또

한 금융위기의 전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은 보호무역 장치들을 도입하여 무역 거래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규제가 필요함이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인데, 경제적 세계화가 초래한 세계무역과 투자 붐은 환경문제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역은 수송에 기반을 두는데, 현재의 수송수단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 의해 움직이므로 세계무역의 증대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무역장벽 제거와 더불어 수송수단의 발달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사용되는데 일조했고, 수출을 위한 현금작물 생산이 토양침식, 지나친 방목, 사막화, 수자원 고갈, 화학오염, 종(種)다양성 상실, 산림벌채, 토양약화 등 지탱 불가능한 생태파괴를 야기하였다.²⁾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해 전염병 문제도 지구적 도전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로 첫째, 세계화와 함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 속도, 범위가 빨라지고 넓어지면서, 전염병의 확산도 급속히 이뤄지고, 예측도 불가능해지며 빠른 대처가 어려워졌다. 둘째, 세계화는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다시 전염병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³⁾ 셋째,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확산은 경제적 마비를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재화, 정보, 사람들이 더욱 밀접하게 세계경제와 통신 네트워크로 통합되면서 전염성 질병도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여 지역과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⁴⁾

이렇듯 가속화된 세계화는 여러 분야에서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와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 황익서 2011, p. 48.

3)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서 열대성 전염병이 만연하고 17억 명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사스) 발병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전 세계에서 사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며, 캐나다 토크는 사스 발병으로 하루 3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J.P. 모건 증권사가 추산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사스 여파로 관광 수입, 소매업, 생산성 부문에서 각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연합뉴스, “사스, 中 대륙 확산세… 전 세계 피해액 300억 달러”, 2003-04-28.

2) 개발협력 차원의 글로벌 공공재 논의의 필요성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개발협력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부족한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그리고 개발협력의 시각을 담아 글로벌 공공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감소에 훨씬 효과적이며, 넷째,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사용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는 전지구적 접근을 통한 공동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DA 성과보존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국제적 개발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이 5대 연구분야의 하나로 선정, 범위연구가 기획되었다.

3.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범위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의 연구범위를 확정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범위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를 전통적인 공공재의 정의,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출발점으로 하여, 효용을 향유하게 되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개념을 채택하고자 하였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모든 국가, 인민, 세대에게 혜택이 확장되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 내렸다.

5) 공공재란 누가 공급하든 관계없이 일단 공급되면 모두가 “재화소비의 편익을 공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즉, 공동소비(joint-consumption)가 가능하면 그 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헌조사 결과 글로벌 공공재와 동일 혹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공공재’와 ‘국제 지역 공공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공공재, 국제 지역 공공재는 글로벌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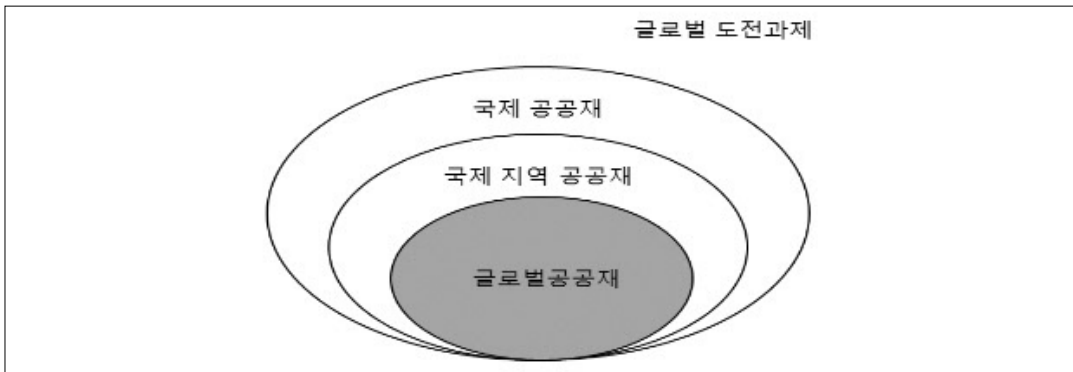
국제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는 글로벌 공공재 보다 광범위한 개념에 속한다. 국제 공공재는 특정 국가가 공급한 공공재로 인한 이익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즉 2개 이상의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된다.

국제 공공재 중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공공재의 기본적 특성인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온전히 작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제 지역 공공재(Regional Public Goods)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이익이 관련국가, 전통적으로 다수의 이웃 국가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국제 지역 공공재로 볼 수 있다.

국제 공공재 중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이익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 볼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공재나 국제 지역 공공재는 모두 국제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국제 공공재 중에는 국제 지역 공공재나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가 존재한다.

한편, 글로벌 도전과제와 글로벌 공공재와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도전과제가 전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공공재 문제는 본질적 특성상 모두 글로벌 도전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 지역 공공재와 관련된 문제도 문제별 속성에 따라 글로벌 도전과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 부족, 식량 위기 등의 문제는 최근 들어 글로벌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당 문제의 해결은 주로 국내적 차원이나 지역적인 접근을 통해 이뤄진다는 면에서 글로벌 공공재라기보다는 국제 지역 공공재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 국제 지역 공공재, 국제 공공재 보다 글로벌 도전과제가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 범위



출처: 저자작성

2011~2015년 ‘KOICA 연구 중기전략’에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가 6대 연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이유가 “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공공재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바, 식량 안보 및 국제무역·금융시스템, 환경, 이주, 분쟁, 위기전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의 마련에 관련된 개발협력 전략을 연구”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범위는 글로벌 공공재와 학술적인 정의에 의하면 글로벌 공공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 둘로 세분화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Box 1〉 KOICA 연구 중기전략: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초점

- ◆ 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공공재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바, 식량 안보 및 국제무역·금융시스템, 환경, 이주, 분쟁, 위기전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의 마련에 관련된 개발협력 전략 연구
-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형성과 관련, 개발 모델의 적정성 및 글로벌 원조구조에 대한 함의 등에 대한 연구

앞에서 분류한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지 않는 글로벌 도전과제가 모두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연구 분야의 범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방대한 주제를 하나의 보고서에서 다 다루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위연구에서는 이 중 ‘글로벌 공공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장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에 관한 범위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겠다.

4.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및 정책

1)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

글로벌 공공재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된 ODA가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CRS 코드⁶⁾를 제시하고 있다.

- 지식생산 및 전파
- 인권
- 전염병 퇴치
-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 통신

그러나 특정 지역의 인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문제 해결로 인한 혜택은 특정 지역에서 향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권 분야는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통신 분야에 해당하는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CRS 코드: 15153) 분야의 경우, 지식 공유 및 전파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통신 분야로 분류하기 보다는 지식 생산 및 전파 분야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범위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CRS 코드를 총 5가지 유형, (1)지식생산 및 전파, (2)전염병 퇴치, (3)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4)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5)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CRS 코드는 <표 1>과 같다.⁷⁾

6) CRS코드는 총 5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자리는 특정 섹터와 분야를 나타내는 코드이며, 뒤에 두 자리는 세부 섹터를 나타내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7)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CRS 코드의 포함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한솔(2012a) 4장 1절 참조

〈표 1〉 글로벌 공공재의 유형별 분류

글로벌 공공재 분야	CRS코드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24010), 중앙금융기관(24020), 통상정책, 행정 관리(33110), 다자간무역협상(33140), 마약 관리(16063)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31165),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43050)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력 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23030), 수력 발전소(23065), 지열 발전소(23066), 태양 에너지(23067), 풍력 발전(23068), 조력 발전(23069), 생물자원 에너지(23070), 임업 정책·행정·관리(31210), 임업 개발(31220), 어업 정책·행정·관리(31310), 어업 개발(31320), 환경정책·행정·관리(41010), 생물권역 보호(41020), 생물 다양성(41030), 자연문화유산 보호(41040)
전염병 퇴치	전염병 관리(12250), 성병 대책(HIV·AIDS 포함)(13040)
지식생산 및 전파	교육 연구(11182), 의료 연구(12182), 통계능력 강화(16062), 에너지 연구(23082), 농업 연구(31182), 임업 연구(31282), 어업 연구(31382), 기술연구 개발(32182), 환경 연구(41082), 연구·과학기관(43082),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15153)

출처: 저자 작성 (조한솔 20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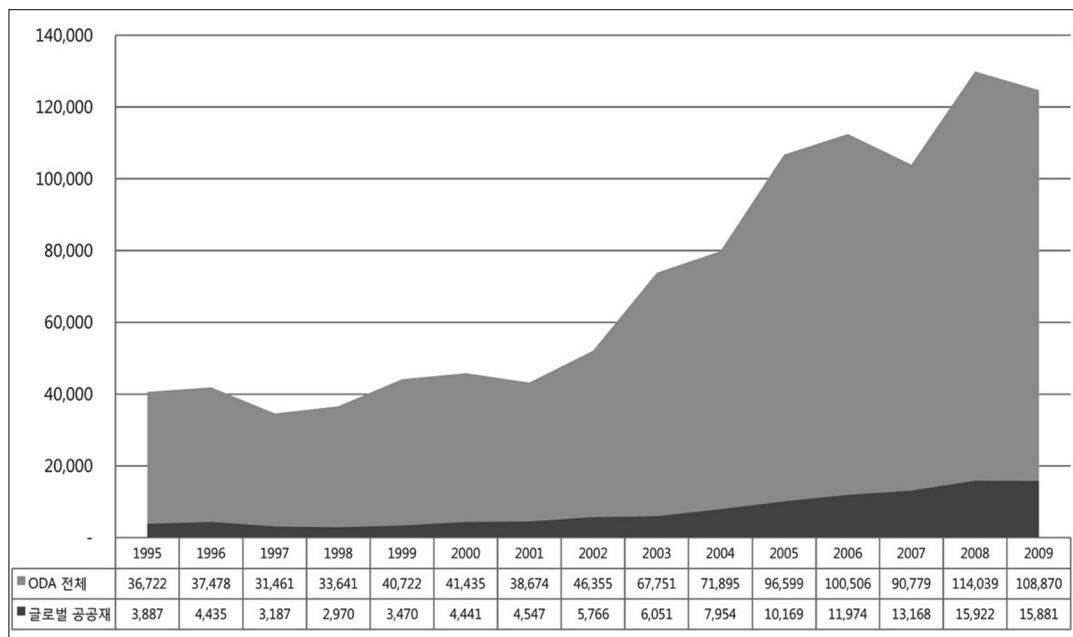
2)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 지원 현황

〈표 2〉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OECD DAC 회원국 전체에서 제공된 ODA 현황과 범위연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한 CRS 코드에 지원된 ODA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⁸⁾ 〈표 2〉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된 금액은 158억 8,100만 달러로 1995년에 제공되었던 38억 8,700만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CRS 코드를 사용한 글로벌 공공재 분야 분석은 해당 분야의 지원 추이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별 비교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가 아닌 다른 지원도 글로벌 공공재 지원으로 분류되어 파악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시킨 CRS 코드에 포함되는 지원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에 반하거나 관련이 없는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공공재만을 별도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통계가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CRS 코드를 사용한 분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 2〉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분야 ODA 약정액 지원 현황(1995-2009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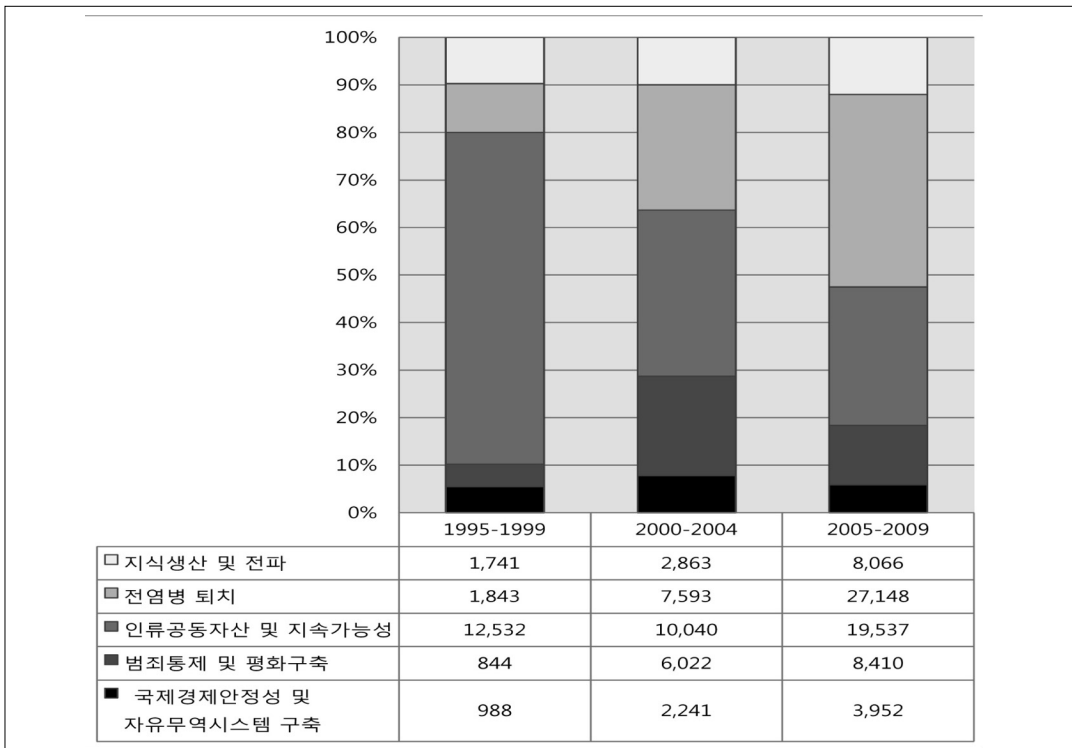


출처: 조한슬 (2012a)

분야별 지원액 비중의 경우,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경우 1995~1999년에는 전체 글로벌 공공재 지원의 약 7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지원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05~2009년에는 약 30%의 지원이 이루어 졌다. 반면 전염병 퇴치 분야는 1995~1999년에는 약 10%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지원 비중이 높아져 2005~200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전체 지원의 약 40%를 차지했다.

〈표 3〉 시대별 · 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약정액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조한솔 (2012a)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통계상으로는 단순히 지원이 증가한 것만이 확인될 뿐, 이러한 증가의 원인이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인지, 자연적 증가인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문제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1년 UN에 제출된 Zedillo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금액인 연간 200억 달러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액수가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DAC 회원국 글로벌 공공재 정책 분석

범위연구에서 OECD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중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제외한 OECD DAC의 22개 회원국의 정부 및 개발원조기관이 발행한

개발협력 정책 문서와 백서를 분석하여,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유무, 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한 전지구적 공동대응의 필요성 인식 여부, 글로벌 공공재 관련 5개의 세부 영역이 분석 대상 국가의 개발협력 중점 분야에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만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연구보고서나 가이드라인, 정책문서를 발간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OECD 회원국 22개 국가 중에서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총 9개 국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로 나타났다. 상기 9개 국가는 글로벌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정책 문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9개 국가의 개발협력 정책을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거버넌스 또는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 강조,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정책일관성 확보, 자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이 그것이다.

한편, 9개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세부 영역 정책 및 실행현황 분석 결과, 각 세부분야의 지원 비중의 차이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각 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선정되고 사업이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말로, 아직까지는 새로운 이슈라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고려가 개발정책 전반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고려나 관련 조치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9개 국가 중 영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별도의 연구보고서나 가이드라인, 정책문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현황과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은 2007년에 ODA 전체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47억 4,200만 달러가 줄어들었으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은 1억 2,500만 달러만 감소하여 지원 비율이 9.8%에서 15.7%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0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비율이 20%까지 증가하였다.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전염병 퇴치가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국제개발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자금 지원 및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ODA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한 민간기금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DFID는 세계적 차원의 지원 및 대응과 개별 국가의 정책 및 사업 수행 사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적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글로벌 공공재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 및 노력이 필요한데, DFID는 지난 10년간 수원국 정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접근법을 사용해왔다. DFID는 글로벌 펀드 등의 글로벌 차원의 재원마련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다음 세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나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한 분야인가?
- 지원으로 인해 어떠한 효과 발생이 예상되는가?
- ODA와 DFID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다음으로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의 전체 ODA 지원액에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에는 5.8%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02년에는 17.3%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9.4%로 하락하는 등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 ODA 지원액의 12.2%에 해당하는 4억 200만 달러를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995~199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중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60%가 넘는 지원을 하여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2005~2009년에는 지식생산 및 전파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약 40%)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스웨덴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활용을 관리,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역할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려온 선진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도 비용이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정마련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1998, 2000, 2002년을 제외하고는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지원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ODA를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20.8%를 지원한 이래 지원비중이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6.9%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는 살펴보면,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중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부 산하 경제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과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⁹⁾는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의 이슈와 과제를 다량 발생시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정책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¹⁰⁾ SECO는 모든 글로벌 이슈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글로벌 이슈는 지역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
- 글로벌 이슈로 발생한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글로벌 이슈는 지역적 접근보다는 주제에 따른 섹터별 접근법이 필요
- 글로벌 이슈의 해결은 국제적 협력,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 기준(가이드라인)의 시행이 필요 등.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 지원 비율이 OECD DAC회원국의 평균 비율보다 낮은 편이다. 1995년을 제외하고는 프랑스는 OECD DAC 회원국보다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2.3%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2003년 이후 공공재 지원 비율은 점차 상승하여 2009년에는 총 10억 8,100만 달러를 제공, 전체 ODA의 11.8%를 글로벌 공공재에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OECD DAC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공공재의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상세한 보고서를 프랑스 주요 원조정책 기구인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및 재정경제산업부(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가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 이행을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국내 정책 및 ODA 사업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다자공여기관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참여하며, 공여국과 다자기구 공동으로 사업 집행을 관리, 감독
- 공여국이 양자원조를 통해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공여국이 국제사회 및 지역기구에서 해당 글로벌 공공재에 관해 주장한 입장과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등.

9) 스위스의 원조체제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DC)과 경제부 산하 경제사무국(SECO)에서 대부분의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

10) SCD와 SECO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주, 물 부족, 경제 거버넌스를 5대 글로벌 도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표 4〉 국가별 주요 글로벌 공공재 정책

국가	주요정책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엔의 효과적 운영과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글로벌 공공재 관련 OECD DAC회원국 차원의 논의와 합의 필요 •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별도의 재정마련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필요 • 보건분야 글로벌 펀드 활용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과 정책일관성 필요 • 다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개발협력 글로벌 구조(architecture) 필요 • 주요 다자기구,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 민간부분과의 협력 강화 및 연계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선진국이 노력과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 •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정 마련 필요성 강조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터별 접근의 필요성 강조 • 국제적 표준과 기준(가이드라인)의 시행 필요 • 글로벌 거버넌스 창설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 다자지원 강조 및 전략적 활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통한 협력 강조 • 글로벌 펀드 담당 부서 창설 •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정 마련 필요 •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한 민간기금의 중요성 강조 • 정책일관성 확보 • 글로벌 거버넌스 창설 필요 •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의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펀드 및 다자지원 활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터중심의 정책 수립 •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논의 및 지원 • 관련 논의에 개발도상국 및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 정책일관성 확보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과 정책일관성 유지 강조 • 글로벌 공공재 관련 유엔의 역할을 지지

출처: 조한솔 (2012a)

5. 한국 개발협력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한국은 2010년에 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2항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¹¹⁾. 비록 범지구적 문제는 글로벌 공공재뿐만 아니라 국제 지역 공공재와 같은 다른 종류의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정신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사항이 상기『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만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KOICA의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¹²⁾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수립 및 도입을 위한 조치가 정책기관과 실행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효과적인 면에서 다자원조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자원조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글로벌 공공재 측면에서 다자원조 예산배분 전략 및 우선순위화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다자원조 추진 전략으로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전체의 ODA 전략에 맞게 종합적인 체계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제8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제출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자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협력적 목표 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는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2011.7.25 법률 제10919호]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②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11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양허성 차관(EDCF) 분야’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다만 녹색성장 사업을 글로벌 이슈 지원으로 분류하여 강조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반면 외교부는 동 계획에서 다자원조의 목표 중 하나로 개발 관련 범지구적 문제 대처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또한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규재원 지원계획을 같이 제시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계획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범지구적 개발문제 지원 계획에는 보건,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환경, 반부패 등 글로벌 공공재와 비글로벌 공공재가 혼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글로벌 공공재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교부의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대한 다자원조 계획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었는가의 여부도 추후 통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6. 정책 함의 및 향후 연구과제

1) 국제사회의 과제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도입 및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체제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만일 국제사회에 초국가적인 중앙정부가 존재한다면 글로벌 공공재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급과 수요는 그것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국가적 중앙정부(글로벌 거버넌스) 건립이나 별도의 국제기구 창설은 어려우므로, 기존의 OECD를 중심으로 한 작업반(task team)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글로벌 공공재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기금 이외에 민간기금 등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경우,

13) 외교부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원조의 목표로 1) 양자원조와 함께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서 MDGs 달성에 최우선 순위, 2) 개발관련 범지구적 문제 대처, 3)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노력 강화, 4) 국제기구 정책수립 및 다자규범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효율성 제고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4가지를 꼽고 있다.

14) 외교부는 UN 및 기타 국제기구 정규재원의 38-55%를 범지구적 문제 해결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재정지원은 주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이 이루어져 일회성 지원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나, HIV·AIDS와 같은 가시적인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던 문제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OECD와 여타 공여국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별도의 재원을 글로벌 공공재 공급 및 관리에 개별 국가들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모두 아우르는 별도의 재원마련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원 마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지원 또는 글로벌 공공재 각 세부 분야별 글로벌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글로벌 공공재의 특성상 국지적 대응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다자원조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하는 정책 심의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다국가 기금으로 특정 목적, 주제 또는 분야에 지원되는 글로벌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전통적인 양자 또는 다자원조의 대상이 다양한 개발 이슈를 포괄하는 반면, 글로벌 펀드의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수직적인(vertical) 접근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cross-border), 지역간 또는 전지구적인 문제인 국제무역, 금융, 기후변화, 보건과 같은 부문에 있어 글로벌 펀드를 활용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¹⁵⁾

넷째, 정책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OECD는 개발협력 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글로벌 공공재 공급 촉진 및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 내 개발정책간, 공여국 내 개발정책과 다른 정책 간, 공여국 간의 개발정책 간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세부 분야(지식생산 및 전파,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정책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사용되는 자금만을 별도로 추적하는 통계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는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CRS코드를 따로 분류하여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각기 개별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포함

15) 글로벌 펀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가 소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과대산정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통계에 잡힌 개발협력 사업이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활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ODA 이외의 재원으로도 공급되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의 특성과, 전세계적인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계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과제

범위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이 도입 및 논의가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기관도 지금부터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마련한다면, 국제적 논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글로벌 공공재는 다자원조 지원 정책과 정책일관성 이슈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관련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문서로 활용하여 한국의 다자지원 전략이나 우선순위 선정 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가 중요 외교정책 이슈로 판단된다면,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통계 개선, 재정마련,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개발협력 실행기관도 글로벌 공공재 관련 실행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글로벌 공공재 관련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미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010년에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되어 KOICA에서 시행된 사업만도 200여건이 넘는다. 따라서 KOICA도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전 사업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 사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에는 국별 접근보다 주제별 또는 범분야적 접근이 더 효과적인데, 현재의 CPS 체제에서는 인권, 여성, 환경만이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범분야 이슈의 확대를 통해 CPS 전략 수립단계에서부터 앞서 언급한 글로벌 공공재 지표나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글로벌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원국내 인프라 시설이나 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때, 해당 공공재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다른 분야의 ODA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연구과제

3장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범위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연구분야를

크게 (1) 글로벌 공공재와 (2) 글로벌 도전과제로 나뉜다는 것을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범위연구에서는 향후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분야 연구과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크게 둘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립한 글로벌 공공재 5대 세부 영역인 (1)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2)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3)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4) 전염병 퇴치, (5) 지식 생산 및 전파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활용한 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추가 연구를 제시하였다. 특히 5대 분야 중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의 시각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예를 들어 공정무역체제 구축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파급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분야 관련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의 연구범위에는 해당이 되나, 이번 범위연구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못하였던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물 부족, 분쟁 취약국 등의 국제 지역 공공재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별도의 연구 진행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범위연구를 마무리하였다.¹⁶⁾ 이밖에도 필요시 관련기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또는 전담체제 마련 등 범위연구에서 국제사회 및 한국에게 제시된 과제의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6) 현재 글로벌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글로벌 도제과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시리즈 연구가 기획되어, 인구증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차례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2010.10.25.

기획재정부.(2011).『2011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양허성 차관(EDCF) 분야』, 2011년 2월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8-1호, 2010.12.21.

조한슬.(2012a).『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ODA연구 2012-04-058. 한국국제협력단.

조한슬.(2012b).「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6호 (2012.5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10).『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글로벌 ODA전문기관 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2010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2011).『KOICA 연구 중기전략L 2011:~2015』. 2011년 1월.

황의서.(2011).「세계화시대 환경의제의 해법 모색」.『대한정치학회보』2011년 6월 (19집 1호): 47~61면. 서울: 대한정치학회.

2. 국외문헌

Cepparulo, Alessandra and Luisa Giuriato.(2009). “Aid Financing of Global Public Goods: an Update”. Department of Economia Punnlica, Rome: Sapienza University.

DFID.(2003). Strategic Review of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

DFID.(2009).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Norwich: The Stationery Office(TSO).

DFID.(2011). Operational Plan 2011~2015. DFID Global Funds Department.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of Swiss Confederation.(2011). Information Sheet SDC-SNSF Fund for Research on Global Issues. Berne: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8). Global Challenges – Ou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Stockholm: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0). Meeting Global Challenges – Government communic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10. Stockholm: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2006). Meeting Global challeng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National Interest. Final Repor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Affairs, République Française.(2011). 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République Française.(2002). Global Public Goods.

OECD DAC. (2010). Task Team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Global Public Goods(TT1). DCD/DAC(2010)5.

Reisen, Helmut., Marcelo Soto and Thomas Weithoner.(2004). Financing Global and Regional Public Goods through ODA: Analysis and Evidence from Th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Paris: OECD Head of Publication Service.

SECO.(2010). Globalization and Global Issues: The Contribution of SECO. Berne: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FDEA).

Speight, Melanie. (2002), “How Much Should DFID Allocate to Global Actions and Funding?”, Lond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e Velde, Dirk Willem., Oliver Morrissey and Adiran Hewitt.(2002). “Allocating Aid to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 Marco Feroni and Ashoka Mody(eds)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centives, Measurement, and Financing. Washington, DC: World Bank and Kluwer Academic Publishers.

UN.(2001). Letter dated 25 June 2001 from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Fifth session Agenda item 101 High-level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consideration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

World Bank.(2001). “Effective Use of Development Finance for International Public Goods”. Global Development Finance: Building Coali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Finance. Washington, DC: World Bank.